非법학도 문호 개방 '성과'… 지방 로스쿨 상당수 半修

〈대학휴학하거나 재학 중 재수〉

〉〉2면 '로스쿨 도입 10년'서 계속

법학외 전공·타교 비율 30% 넘어
지방 로스쿨 '배려 전형' 선발로 변시 합격률 평균 보다 더 낮아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출신 계열 현황〉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 계열	252	154	406	23	11	34	275	165	440	20.89
상경 계열	316	168	484	19	7	26	335	175	510	24.22
사회 계열	217	244	461	25	11	36	242	255	497	23.60
인문 계열	136	169	305	12	9	21	148	178	326	15.48
공학 계열	79	23	102	5	3	8	84	26	110	5.22
사범 계열	28	46	74	2	2	4	30	48	78	3.70
자연 계열	28	21	49	0	1	1	28	22	50	2.37
예·체능 계열	10	8	18	1	0	1	11	8	19	0.90
의학 계열	9	5	14	0	0	0	9	5	14	0.66
약학 계열	2	6	8	0	0	0	2	6	8	0.38
농학 계열	3	2	5	0	0	0	3	2	5	0.24
신학 계열	2	1	3	0	1	1	2	2	4	0.19
기타	26	14	40	4	1	5	30	15	45	2.14
계	1,108	861	1,969	91	46	137	1,199	907	2,106	100

/자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중 사회배려층 7%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 선발하도록 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배려층의 로스쿨 입학은 지난 10년간 1307명(6.29%)이었고, 사회배려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 입학생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지면, 이에 따른 선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존폐 위기감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반수나 재수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 이모(33)씨는 "지방 로스쿨 재학생 중 상당수가 변시 합격을 위해 서울지역 로스쿨에 재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로스쿨 입학도 힘들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도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로스쿨 취지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경우 지방인재와 사회배려층 선발인원이 더 많아 변시 합격률은 더 낮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 외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다. 7회 변호사 시험의 전체 합격률 평균은 49.35%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대(59.79%)를 제외한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원광대(24.63%), 전북대(27.43%) 등 모든 지역 로스쿨 합격률이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성과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이외의 전공자들도 법조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은 성과로 꼽힌다.

로스쿨 입학생 중 비법학사나 타교출신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넘었다.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법학전공자는 합격자의 20.89%였고, 나머지 79.11%는 비법학사였다. 계열별로 상경계열 출신이 2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계열(23.60%), 법학계열(20.89%), 인문계열(15.48%)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공학계열(5.22%), 사범계열(3.70%), 자연계열(2.37%), 예·체능계열(0.90%), 의학계열(0.66%) 출신도 있었다.

또 전체 합격생 중 타교출신이 77.40%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사회 취약계층 입학자는 1307명(평균 6.29%)였고, 각 로스쿨별 등록금 총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70%를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급해 사회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액 등록금 논란에 따라 지난 2016년 15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 13%를 인하했고, 나머지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2019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가 10월1일~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9753명)해 올해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전년도 평균(5.19대 1)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치열한 경쟁 뚫고 꿈을 향해

지난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삼육대 2019학년도 수시모집 미술 실기고사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靑 인사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재요청
채택 가능성 낮아 임명 강행 가능성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한 뒤에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여당은 1일 오전 9시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기간이 3일로 짧은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여전히 유 후보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 의견이 타협을 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 직후인 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장관 임명 강행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하반기 중 정책숙려제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영·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해 보인다.

/한용수 기자

'개천서 용나기 어렵다'
부모 사회·경제 지위 높으면 자녀 학력 ⬆

2018 OECD 교육지표
10년 전 보다 학력 격차 더 벌어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표는 약 0.79로 나타났다.

PISA는 학업성취도를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1등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2등급 이상은 기초미달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약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가 0.89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위 25% 그룹의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 비율이 약 11% 적어진 것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더불어 분석된 성별 균형 지표(Gender Parity Index)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별 균형 지표가 1.06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6%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미 의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정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줄 세우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인천대, 송도 캠퍼스에 '에너지 모니터링 센터'

국립 인천대학교는 에너지 기업 지멘스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캠퍼스에 에너지 모니터링 센터(ASC)를 구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센터는 인천대 송도 캠퍼스에서 쓰는 신재생 에너지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이 캠퍼스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가량을 태양열 에너지에서 얻는다.

이번 센터 구축은 인천대가 지멘스와 올해 5월 송도 캠퍼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이뤄졌다.

인천대와 지멘스는 이후 저탄소 그린 캠퍼스 구축, 인천 원도심의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섬과 접경 지역의 에너지 자립 기반 스마트 서비스 구축 등의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모니터링 센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활용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이 지난 28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 현대사회 모빌리티 연구한다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출범

건국대학교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이주와 이민 등 사람과 물건, 정보와 이동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모빌리티(Mobility) 연구를 추진하는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원장 신인섭 교수)을 지난 28일 개원하고 정식 출범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은 지난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향후 7년 간 총 7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인간과 테크톨로지의 공(共)-진화(Co-evolution)에 기초한 모빌리티인문학: 미래 인문-모빌리티 사회의 조망과 구현'을 연구한다.

건국대 새천년관 11층에 자리잡은 연구원은 모빌리티 연구의 세계적 공유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HK+ 모빌리티 인문교양센터'와 '모빌리티인문 100강'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